

[서식 예]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소멸시효 경과전 주채무 이행판결있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보증채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4. 2.부터 2000.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99. 1. 1. 소외 ◇◇◇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를 보

- 증인으로 하여 갚을 날짜를 1999. 4. 1.로 하여 금 10,000,000원을 소외 ◆◆◆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가 소외 ◆◆◆에게 갚을 날짜에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갚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외 ◆◆◆를 피고로 2006 3. 1.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소외 ◆◆◆가 재산이 없어 위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위 보증계약에 따라서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갚을 날짜의 다음날인 1999. 4. 2.부터 원고가 소외 ◆◆◆를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의 소장부분이 소외 ◆◆◆에게 도달한 날인 2006. 3.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금전소비대차 및 보증계약서 |
| 1. 갑 제1호증 | 판결문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2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는데(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